중앙·중외·일곡공원 보존 해법찾기 나선다

광주시민단체협, 공원 일몰제 '민간공원개발' 토론회 제안서 제출 일부업체 참여자격 싸고 이의 제기 움직임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 주지역 민간공원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3 대 공원으로 불리는 중앙·중외·일곡공원 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가 열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 3대 공원 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28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 일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5층 예산 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 작된다.

광주전남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맡고 있

는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과) 교수가 '광 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도시계획적 측면 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동범(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같은 주제를 공원·녹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대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은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홍인화 중외공원 사랑모임 대표, 진혜숙 한새봉 숲사랑이 활동가도 토론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낸다.

전진숙 광주시의원, 이경희 광주환경운

동연합 정책실장, 박영진 광주시 공원녹 지과 공원조성계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민 간공원 개발 과정에서 3대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25곳 으로 면적만 11㎢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 데 민간공원 10곳(958만㎡)에 대해 70%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는 우선 1단계로 마륵·송암공원 등 4 곳(132만㎡)을 개발한다. 나머지 중앙·중 외·일곡·영산강대상·송정·신용공원 등 6 곳은 오는 10월 말 2단계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제안서 를 제출한 일부 업체들이 사업참여 자격 을 둘러싸고 광주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 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리케이트 사라진 청와대 앞길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바리케이트가 사라진 청와대 주변 도로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권역재활병원 5년만에 흑자… 장애인 맞춤병원 '톡톡'

광주시 "적극 시설 투자 성과" "수십억 재정지원 덕택" 비판도

광주의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개원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환자 숫자도 1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장애인들의 맞춤형 재활병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애초 이 병원은 운영 적자 보전과 장비 구입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병원 경영 논란이 적지 않았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호남 권역재활병원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 적자 보전액은 68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2014 년도 5억원, 2015년 6억2000만원과 비교 해 큰 폭으로 줄었다.

병원 운영상태도 지난해 6월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개원 5년 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입원 환자 수도 2013년 개원초 연간 3200명에서 지난해 말 5만여 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의료수입은 3억원에서 지난해 72억원으

의료수입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의료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은 재활병원 시설과 운영개선 등에 재투자한다.

좋지 않은 접근성과 비효율적인 병원구조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탁법인인 조선대병원과 재활병원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에 나서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광주시는

광주시는 전문통합재활치료실 개원과 전국 최초 로봇치료기 등 200여종의 최첨 단 의료장비 구입에 36억원을 투자했다. 심지어 병원 경영난에는 12억원의 긴급 자금도 지원했다.

병원 측도 의료인력 확충,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병원 내외부 환경개선, 직원복지 향상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건립비용만 300억원에다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으로 만든 쥐꼬리만 한 흑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다.

이 병원은 시비 165억원, 국비 135억원 등 300억원을 들여 북구 본촌동에 지하 1 층, 지상 4층 규모로 20013년 개원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관계자는 "환자 중심의 재활치료로 장애를 가진 많은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선진병원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 명사십리 등 해수욕장 4곳 내달 7일 개장

전남지역 53개 순차 개방 가요제·스포츠 체험 다양

오는 7월 7일 완도 신지명사십리, 고흥 대전, 보성 율포솔밭, 영광 가마 미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53 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전남도는 26일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4곳의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 성수기에 들어서는 7월 중순부터는 고흥 남열해돋이,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진도 가계, 신안 우전 등 유명 해수욕장들이 연달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완도 '신지명 사십리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피서객 들이 찾는 전남의 대표 해수욕장이 다. 백사장 길이가 4km에 달하며 울 창한 송림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인근에 해수녹차탕과 해수풀장, 해안누리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소로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다시 찾도록 텐 트촌, 그늘막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 비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 Γŀ

특히 해변가요제, 야간 영화상영, 용왕제 등 해수욕장마다 특색있는 볼 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름다운 전남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기 회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리면서 친숙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종 해양 생기소포츠대회와 체험교실, 갯벌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6월과 9월 전국 윈드서핑대회와 바다수영, 8~9월 핀수영대회가 여수·무안에서, 국제파워보트대회,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가 9월 목포에서 열린다.

비치발리볼대회가 7~8월 보성·함 평에서, 갯벌축제가 7~9월 무안·영 광에서 열린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아름다운 섬과 긴 해안선,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편히 쉴 수 있고, 즐길거리도 풍부하다는 것이 전남 해변의 매력"이라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물놀이 공간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근혜정부, 北 정권교체·김정은 암살 검토"

日 아사히신문 보도… 국정원 "사실무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도 동차·열차

모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암살도 김토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6일 보 도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남북당국자 간 회담이 결렬된 뒤 박 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교체를 목표로 한 정책 서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정책을 국가정보원이 주 도해 만들었다면서 내용이 자세히 알려 지지 않았으나 김정은 은퇴·망명·암살 등의 계획이 포함됐던 것 같다고 추정했

소식통은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 자칫 무력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세심 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아사히신문에 말 했다

x다. - 그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 타는 자 동차·열차·수상스키 등에 '작업'해 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경계가 엄해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움직임 이외에 '작전계획 5015'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암살을 포함한 게릴라전 요소가 포함된 상황을 우려해 북한이 경 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작성한데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면서북한의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묵살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응했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